

# 전북자봉센터장 예외조항 사라진다

행안부, 센터장 자격요건 과대해석 금지 공문  
도, 예외조항 삭제·시군 법인화 추진키로

'관권선거 의혹'의 중심에 선 전북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자격요건이 변경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자격요건 중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행정 안전부에서 내려온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최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화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하달했다.

특히 센터장 채용시 자격요건의 자체적 확대해석 금지를 명확히 했다.

또 자원봉사센터장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도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이라며 "자치단체가 공개모집 시 자격요건 항목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자격요건 항목을 두는 것은 법령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입장원서를 센터에서 관리해 '관권선거'가 불거졌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지목됐다. 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도 없는 센터장 채용 예외조항을 뒤, 단체장의 보은성 인사통로로 활용됐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도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등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도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모두 무려화시킬 수 있는 기타 이와 등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해 센터장을 채용해왔다.

이번에도 도는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범인화를 추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불

미스러운 일을 기점으로 자원봉사센

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 중립

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권선거 의혹으로 송 전 지사

부인과 송 전 지사의 전 비서실장 등

14명이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

"의원직 사퇴, 유권자 배신"

김호서 전주을 예비후보  
국힘 정운천 의원 겨냥



4·5 전주 국회의원 재선전에 나선 무소속 김호서 예비후보가 경쟁자인 국민의힘 후보인 정운천 의원을 겨냥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버리고 출마에 나서는 게 쟁발통 정치냐"며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 협직 국회의원 임기를 1년 2개월 이상 넘겨 놓은 상태에서 사퇴하고 재선전에 출마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잘 이끌어 가라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내팽개치고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정운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전북의 협력 국회의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며 "이는 한미FTA로 당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배신하고 유통하는 체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경찰국 반대 좌천성 인사 논란  
전북경찰직협 '블랙리스트'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이하 직협)이 최근 단행된 경찰청 총경급 인사에 대해 경찰관 블랙리스트'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에 참여한 총경들이 보복·문책성 인사의 회성양이 됐다는 것이다.

직협은 9일 입장문에서 "경찰청은 이번 총경 인사에서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한 50여명 중 징계를 받거나 퇴직한 사람을 제외한 40여 명에 대해 전원 문책성 인사를 했다"며 "이들 중 28명은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냈고 12명은 의사와 관계없이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를 단행해 강제 발령을 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갖 승진한 총경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112차인증상황실 상황팀장에 총경 회의 참석자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인사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면 이는 새로운 형태의 경찰 블랙리스트로 간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역량, 자질, 공직관 책임의식 등 총경 인사의 평가 기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경찰청은 총경급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뉴스



전북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9일 전주개인택시조합에서 열린 전북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아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준비태세 여전히 허점 투성이"

도의회 문건위, 조직위 업무보고 청취

이수진 의원도 조직위 측의 디테일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합당한 계약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스코트 인형이나 텁블러 등 중국산 굿즈를 판매할 경우 대회개최가 흥 보호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만 훠손시킬 수 있다"고 질타하면서 "굿즈 상품의 가치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굿즈 상품 판매 전략으로 수익성 제고와 이미지 홍보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위측의 허점은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윤수봉 의원은 "지금이 대회준비 막바지 시점이고 참가자 모집실적이 저조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도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도 업무보고서 어디에서도 참가자 모집현황 변동 추이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서 조직위의 느슨한 태도를 질타했다.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전북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라도 현장에서는 횟구호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숙 의원은 "아태마스터스가 행락철인 5월에 개최되고 시군별로 지역축제도 접종되어 있으므로 행사 축제으로 효과가 빙감되거나 않도록 축제 개최 일정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시군 축제 조정 내역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조직위측의 답변은 명확한 협회 제시가 없었다.

윤 의원은 또 참가자 모집현황을 일단으로 도의회와 공유하기로 했지만 이미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강오 총장은 "일단으로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일보(日報) 보고

나 공유는 한 차례가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양해석 의원은 "파견 인력 중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인력이 포함돼 있다가 철수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막바지로 칠성을 수록 유관기관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협조가 절실히 재파견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굿즈 상품의 가치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굿즈 상품 판매 전략으로 수익성 제고와 이미지 홍보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직위측은 대체로 드러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금도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와 조직위의 역할을 집중 투입했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도부의 전략적 고민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행자위, 대변인실 업무보고  
행정부지사 공개 사과로 재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9일, 대변인의 불성실한 답변에 등으로 중단되었던 대변인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최근 불거진 대변인실 직원의 감찰행위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란의 자초지종을 청취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했으나 대변인의 불성실한 답변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등으로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이다.

도지사를 대신한 행정부지사의 공개 사과로 재개 된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공통으로 의회와의 협치의 중요성과 소통을 강조하였으며, 대변인이라

는 직책이 지사의 일을 대신하는 중요 한 자리인 민족 향후 신중한 자세와 처신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도청 간부 공무원 '갑질' 사태 확산 조짐

도의회 지적 이후 추가 피해자 진술  
도 감사관실 "엄중하게 조사할 것"

상번기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의 '갑질'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전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사무관인 A팀장은 지난해 회식 도중 후배 공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진을 앞둔 피해자는 불이익을 염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팀장은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은 채 미국으로 파견됐으며, 최근 도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6일 2023년

지체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전북도의 A팀장 처리가 공정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김성수 의원(고창1)

/뉴스

## "물 관련 생태계 회복 대안 제시"

민주 김윤덕 의원,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  
8월 개최 예정 새만금 세계잼버리홍보에도 박차



는 논의를 하는 등 회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이 더욱 빈번해져 농부는 생계 수단을 잃고 이주 및 도심화가 속속되고,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회·경제적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엔총회에서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물 관련 생태계 회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당면한 기후 위기에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공조 체계 또한 모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출장에서 유엔총회 성과뿐 아니라, 8월 개최될 예정인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각국 국기대표단, 유엔지도부를 만나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그들에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겠다"라고 밝힌 뒤,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파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국 국기대표단, 유엔지도부를 만나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그들에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겠다"라고 밝힌 뒤,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파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전주장학숙을 방문해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사생들의 생활실 및 식당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하는 등 출발한 현지 의정 활동을 펼쳤다.

## 도의회 행자위, 전주장학숙 현장의정 활동

개보수에도 불구하고 석면공사 등 조속한 시설개선과 입사생 생활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추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설점검 후 현장 근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근무자를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